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 혁신

종 합

추진 계획

2018. 3.

목 차

I. 추진배경	06
II. 정부혁신 추진과제	09
전략 1.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14
전략 2.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	21
전략 3. 낯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34
III. 새로운 정부혁신의 특징과 달라지는 모습	43
IV. 혁신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47
<붙임 1> 사업별 주관부처 및 추진일정	51
<붙임 2> 지자체 핵심사업	54

추진 경과

[정부혁신 추진방향(안)] 수립 : '17.10.~12.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전략수립 TF 운영,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향(안) 수립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수립 지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18.1.10.),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말씀(18.1.16.)을 통해 정부혁신 필요성 말씀 및
종합 추진계획 수립 지시

* “2월 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정부혁신 추진방향(안)] 공유 및 토론

제1회 중앙부처·지자체 정부혁신책임관(기조실장급)회의
(18.1.17.~19.), 장·차관 워크숍(18.1.30.)을 개최하여
정부혁신 추진방향 논의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향식 (bottom-up) 추진계획 수립

- 각 부처·지자체별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18.1.17.~2.2.
 - [정부혁신 해커톤] 개최: '18.2.7.~2.8.
 - 신규 과제 발굴, 정부혁신 추진방향 및 개선 필요사항 등 토론
 - * 정부혁신에 관심 있는 부처·지자체 5급 이하 실무자(100명) 참석
- ⇒ 과제 발굴 : ‘국민참여플랫폼’, ‘클라우드저장소’, ‘실패박람회’ 등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부혁신 추진 : '18.2.2.~3.19.

- [정부혁신국민포럼] 국민위원 모집(3.5. 현재 2,143명 등록)
 - 국민이 원하는 정부혁신 방향 제안
- ⇒ 주요 키워드 : ‘공정’, ‘투명성’, ‘공공성 회복’, ‘소통과 협력’ 등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수립·발표 : '18.3.19.



추진 배경

1.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부 운영으로 전환

- 효율과 성장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국민경제 전체의 크기는 커졌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함
 - * ('17)더 나은 삶의 질 지수(BLI) : 29위(OECD 38개국 중) / 공동체지수(38위), 환경(36위), 삶의 만족(30위), 일과 삶의 균형(35위)¹⁾
 - * ('17)OECD 유리천장 지수 : 29위(OECD 29개국 중 5년 연속 꼴찌)²⁾
-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정 운영 전환으로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구현할 필요

2. 정책의 시작도 끝도 국민, 참여민주주의의 완성

-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민사회 역량을 흡수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 이제 정책의 모든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뜻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를 완성할 때임
 - * ('17)WEF 국가경쟁력평가 중 정책결정의 투명성 : 98위(137개국)
 - * ('17)기존 정부혁신의 문제점 조사 : 국민과 소통이 적은 일방향적 혁신(59.5%)³⁾

※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소(OECD [정부혁신 트렌드] 보고서, '17.2월)

- ①관료적 장벽 극복 ②투명·개방적 신뢰에 기반한 시민과의 관계 구축
- ③시민들의 아이디어활용 ④혁신 촉진 문화 형성

3. 자발적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

-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이나 조직문화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정부신뢰도와 청렴도도 제자리 걸음
 - * 정부신뢰도는 OECD 평균인 42%의 절반 수준인 24%로 최하위인 32위('17)⁴⁾
 - * ('18)부패인식지수(CPI) : 51위(180개국, 100점 만점에 54점)
- 개혁의 구경꾼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로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어 주는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부 구현

1) OECD Better Life Index(BLI·더 나은 삶 지수), 2017(38개국 대상)

2) OECD(The glass-ceiling index: environment for working women), 2017년(29개국 대상)

3) 한국갤럽, 『정부3.0(정부혁신) 국민여론조사』, 2017, 19세 이상 성인 2,014명 대상

4) OECD, 『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7 (35개국 대상)

정부혁신국민포럼 접수 의견 분석 결과

○ 조사 개요

- 조사방법 : 정부혁신국민포럼 홈페이지(innogov.kr)를 통해 ‘내가 생각하는 정부혁신’ 의견 수렴
- 조사기간 및 참여인원 : '18.2.1.~3.5. / 2,143명 참여
- 분석기관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분석결과

- ‘내가 생각하는 정부혁신’ 핵심 키워드 분석

핵심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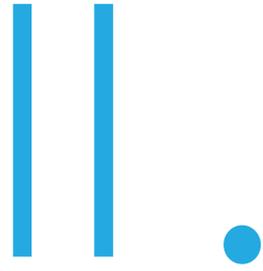
정부혁신국민포럼 조사결과(2,143명) / '18.2.1~3.5)

공공성 회복(10%)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14%)	국민 소통과 협력(8%)
국민 삶의 질 개선(6%)	현장중심 적극행정(9%)	폭넓은 국민 참여(5%)
취약계층 보호(6%)	효율적인 정부(8.6%)	...

국민 삶 개선, 사회적 가치 44.3%	넓은 관행 혁신 33.7%	참여·협력 22%
--------------------------	-------------------	--------------

○ 시사점

-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 ‘공공성’, ‘현장중심 적극행정’, ‘효율적인 정부’, ‘국민 소통과 협력’이 5대 핵심 키워드
- 국민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은 ‘약속을 잘 지키는 정부’, ‘정의로우한 정부’ 등으로 나타남
 - * ‘정부’와 동시에 제시한 키워드는 ‘약속’, ‘의견’, ‘정의’임
- 혁신에 대한 국민의 지배적인 생각은 ‘사회 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
 - * ‘혁신’과 동시에 제시한 키워드는 ‘해결’, ‘정의’, ‘지속’, ‘집행’



정부혁신 추진과제

〈 정부혁신 비전 체계도 〉

비전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

목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0위권,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

3대 전략



핵심 과제

- | | |
|-------------------------|---|
| <p>사회적 가치 구현</p> | <p>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혁신 하겠습니다.</p> <p>②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인사·조직·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p> |
| <p>참여협력</p> | <p>③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p> <p>④ 정보를 낱알이 공개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정부가 되겠습니다.</p> <p>⑤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p> |
| <p>신뢰받는 정부</p> | <p>⑥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p> <p>⑦ 국민중심 4대 행정혁신(데이터·창의·규제개혁·낭비제로)을 실현하겠습니다.</p> |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

전략	10대 중점사업
 사회적 가치	①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재정투자 확대('18) ◆예비타당성평가, 예산편성, 재정사업평가 등 재정보운과정 혁신 ◆안전, 환경, 교육, 보건·복지, 고용 분야 예산 대폭 확대
	②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도입(~'22)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40% 여성비율 달성 ·고위: ('17)6.1%→('22)10%, 공공기관임원: ('17)10.9%→('22)20%, 위원회: ('17)38%→('22)40%
 참여 협력	③ 국민 토론 광장, '광화문 1번가'상설 운영('18) 해커톤 ◆국민의 아이디어 제출공간이던 광화문1번가를 정부-국민간 토론을 통해 실질적 결과로 도출하는 '공공숙의의 장'으로 개편하여 온-오프라인 상설 운영 ◆기관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참여방식 중 국민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참여할 수 있는 대표창구로 운영
	④ 예산·법령 등 핵심정책과정에 국민참여 강화('18) ◆국민참여예산제 본격 도입, 주민참여예산사업 비중 확대 ◆국민참여법령심사 및 국민참여형평가 확산, 공청회·청원 제도 개선
	⑤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확대('18) ◆주차장, 회의실 등 편의시설 주민 개방 확대, 단일포털을 통한 예약·결제 가능 ◆노후청사를 「공공청사+수익시설+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 ◆안전, 환경,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국가중점·신산업 데이터 대폭 개방
	⑥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인사·조직·평가·시스템 개편('18) ◆고위공무원단 및 전문직 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협업정원제·협업조정평가 도입 ◆기관 간 문서 공동기안·결재 가능한 '클라우드 온-나라'구현
 신뢰 받는 정부	⑦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관용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18) ◆채용비리 발각시 수사의뢰 등 엄정조치, 부정합격자는 퇴출 ◆금품수수 공직자 과감히 퇴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시 형사처벌 ◆기업 자금출연 요구 등 갑질 행위 징계
	⑧ 성희롱·성폭력 걱정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없는 근무환경('18) #기발표 ◆모든 성폭력 범죄 공무원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당연퇴직, 성희롱 등으로 징계 시 실·국장 보직제한 검토 ◆성폭력 관련 부당인사행정을 제보하는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운영
	⑨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서비스 혁신('18) ◆안전·복지 등 생활 밀접분야 공공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지도(커뮤니티맵핑) 제작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기반 생활 밀착형 서비스
	⑩ 낯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18) 해커톤 ◆혁신적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벤처형 조직'시범운영 ◆적극적 업무추진 시 발생한 과실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할 경우 감면

정부혁신 사업 목록 (21개)

전략	정부혁신 사업(21개)
 사회적 가치	과제1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혁신 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재정 투자 확대(★) ② 재정사업 심사·평가에 사회영향평가 요소 반영
	과제2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인사·조직·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참여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공공부문 여성 임용 목표제 10·20·40도입(★) ④ 경찰·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으로 안전 골든타임 확보 ⑤ 사회적 가치 중심 공공부문 성과평가 전면 개편 ⑥ 승진 및 성과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과제3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국민 토론 광장, '광화문1번가'상설 운영(★) 해커톤 ⑧ 예산·법령 등 핵심정책과정에 국민참여 강화(★) ⑨ 국민의 뜻을 섬세하게 살피는 열린정책 소통체계 구축
 신뢰 받는 정부	과제4 정보를 낱알이 공개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정부가 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확대(★) ⑪ 누구나 알기 쉬운 '국민세금 사용명세서' 공개 ⑫ 식품, 안전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정보 집중 공개
	과제5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⑬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인사·조직·평가·시스템 개편(★) ⑭ 칸막이 없는 '정부합동 원스톱 민원센터' 구축 ⑮ 성과제고와 정부신뢰를 위한 부처내 부처간 협업 강화
	과제6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⑯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부패 관용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⑰ 성희롱·성폭력 걱정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없는 근무환경(★)
	과제7 국민중심 4대 행정혁신(데이터·창의·규제개혁·낭비제로) 실행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⑱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⑲ 낮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 행정(★) 해커톤 ⑳ 국민불편·부담을 야기하는 규제혁파 및 행정·민원 제도 개선 ㉑ 불필요한 행·재정낭비 제로시대 해커톤

※ 상기사업은 정부혁신 추진관련 대표사업 중심으로 정리, 추후 기관별 실정에 맞는 사업 추가 발굴 예정 / (★)는 10대 중점사업

사회적 가치란?

○ 개념 및 체계

- (개념)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 (체계) 헌법적 가치로서 사회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가치이며, 경제적·환경적·문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상위 가치
 -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사회의 재생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치로서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

○ 세부 분류별 의미

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향상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최저임금인상, 고용안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이사제,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전략 1.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과제1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혁신 하겠습니다.

그간 양적 성장·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국가재정 운영방향을 전환하여, 인권, 안전, 공동체, 환경 등 사회적 가치 관점을 중점 반영하도록 재정혁신 추진

1-1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재정 투자 확대('18)

중점

○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

- 예산 편성지침에 사회적 가치 구현 사업 투자 확대 명시
 - 중앙부처 예산안편성지침(3월) 및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7월) 반영('18)
 - * '19년 예산안 편성시 중점 투자방향으로 선정: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지역 주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사업으로 신설·반영('18)
 - * 시·도별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 사회적 가치 핵심요소에 대한 투자 확대

- 일자리, 안전 등 관련 분야 예산 대폭 확대
 - * 주요 분야별 예산규모('18년) : 안전 15.1조원, 일자리 19.2조원, 보건 10.9조원
 - *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안전예산 확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선 검토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 사회가치기금 설립 지원*,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경제 지원계정 (보증규모 5,000억원) 신설
 - * 민간주도로 3,000억원 규모로 설립, 정부는 민간재원 범위내에서 지원 검토
 - 공공조달 입찰시 사회적책임 평가항목을 확대
 - * 사회적책임을 여타 신인도 평가항목과 분리 심사하여 실효성 강화(낙찰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계약예규 개정)
- 행정·공공기관 친환경차 비율 60% 달성(~'22)
 - * 「친환경자동차법」 및 「수도권대기법」 시행령상 친환경차 의무 구매·임차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60% 실현

1-2 재정사업 심사·평가에 사회영향평가 요소 반영('19)

○ 사전심사 단계부터 사회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종합 평가

-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 도입('19)
 - 예타 평가체계 개편 연구용역 추진('18)
 - '사회영향평가' 항목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신설('19)
 - * 예타평가 항목 : (현재) 경제성 분석(35~50%), 정책성 분석(25~40%), 지역 균형발전 분석(25~35%) → (변경(안))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사회영향평가

○ 재정사업 성과평가 시 사회적 가치 항목 반영

- 일자리창출,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을 추진
 - * 예 :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긴급복지,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등
- 보조사업의 경우는 사업 연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 검토

○ 각 부처 공모사업 선정·배분 시 사회적 가치 사업 중점 지원('18)

* 예 : 초등학교 앞 보행로 조성 '18년 내 완료(816개소, 특교세 514억원)

◆ 기관별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정책 사업 예시(18)〉

과제명(부처)	지원 규모 및 대상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에너지 바우처 신규 제공<산업부>	중증희귀질환자 2만명
영세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고용부>	236만명 (사회보험료 지원 병행)
지방대 의·약학계열,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특수학교(급) 확충 <교육부>	전체 인원 중 의약학계열 30%, 전문대학원 20% 지역인재 선발 21개학교, 1,250학급 신설(~22)
근로청소년 권익 침해 관련 현장 중심 피해예방 및 지원<여가부>	부당처우 해소율 70% 이상, 전국 3개권역 확대(중부/전라/경상)
범죄피해 아동·장애인 지원을 위해 진술조력인 양성·배치<법무부>	6.1억 투입, 진술조력인 양성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를 통해 여성농업인 보육·보건서비스 지원<농식품부>	673개소 (20개소 확대/복지부 협업)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국토부>	어린이 : ('16)16,335개→('22)18,155개 노인 : ('16)1,107개→('22)2,107개소
사회적 배려층 대상 '독도'직접 체험 지원, 65세 이상 저소득·다문화가구,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해수부>	연 500명 (4박 5일간) 연간 최대 12일/경로당은 24일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속 지원, 가정어린이집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적용<행안부>	사업용 4% → 1~3%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입법 예고, ~'18.9월)
여성 기술인 경력복귀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과기부>	414개소/103.5억원
탈북민 포털을 통한 온라인 민원발급 개시<통일부>	탈북민 전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를 통한 어린이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식약처>	32,600개소 ('17년대비 507개소 확대)
“안전속도 5030” 도심지 속도제한 50km/h, 어린이 보호구역 30km/h<경찰청>	어린이 및 보행자 전체
사회적 경제조직인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신설<조달청>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개정('18.3월)
문화유산교육을 통한 사회적 약자 등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방문학교) '22년까지 농어촌지역 82개 전체(100%) 확대
고령농업인의 보유기술과 솜씨 등 소득창출 사업화 지원<농진청>	106개 소 (22년까지 월소득 40만원 달성)

※ 상기 사업은 예시이며, 기관별 정부혁신 실행계획('18.2)에서 발췌

과제2 :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인사·조직·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효율성 위주의 인사·조직 운영, 내부 프로세스·단기 실적 위주의 공공부문 성과평가를 국민 삶 관점으로 전면 개편

2-1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22)

중점

○ 공공부문 여성 진출 대폭 확대

- 여성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등 유리천장 허파
 - 진입부터 관리직 진출까지 인사상 차별요소를 개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의 고위직 임용 목표를 설정하여 여성참여율 확대
- * ('17) 여성 임원 OECD 평균 20.5% / 여성 관리직 OECD 평균 37.1%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분야별 2022년 달성 목표〉

부 분		'12년 실적	'17년 실적 (잠정)	'22년 목표	'17년 대비 '22년 증가율	
공무원	국가	고위공무원단	4.2%	6.1%	10.0%	63.9%
		본부 과장급 (4급 이상)	9.3%	14.0%	21.0%	50.0%
	지방	과장급 (5급 이상)	9.9%	13.0%	20.0%	53.8%
공공기관	임원	8.6%	11.8%	20.0%	83.5%	
	관리자	11.5%	21.9%	28.0%	27.9%	
교원	국립대 교수	13.7%	16.2%	19.0%	17.3%	
	교장·교감	24.6%	38.6%	45.0%	16.6%	
군인	간부	4.3%	5.5%	8.8%	60.0%	
경찰	일반경찰	7.5%	10.8%	15.0%	38.9%	
	해양경찰	6.2%	11.3%	14.4%	27.4%	

○ 정부위원회(500여개) 여성위원 비율 40%로 확대(~'22)

- 중앙부처 여성위원 비율 40%, 지자체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달성
 - * 여성위원 비율: 정부위원회 37.8%, 지자체 위원회 30.2%('16.12월)
 - ** '18년 정부 및 지자체 조직관리지침 반영

※ 정부위원회 비수도권 위원 비율 40%로 단계적 확대(~'22)

* 비수도권 위원비율: 27.2%('18.2월)

2-2 경찰·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으로 안전 골든타임 확보(~'22)

○ 인력운영 성과연동제 도입

- 공공성을 강화하는 현장민생 중심 인력·조직 보강 및 기능 강화
* '18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정부혁신 및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기능재편 등 규정
-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현장서비스개선도’(치안·소방·교육·근로감독)를 측정, 인력운영(보강·감축)에 활용하는 ‘인력운영 성과연동제’ 도입('18)

〈사업 예시〉

- 경찰 : 112긴급신고 현장출동시간('16)6분51초 → ('18)6분26초 → ('22)5분35초
- 소방 : 119화재 현장출동시간('16)7분21초 → ('18)7분17초 → ('22)7분 이내
- 근로감독 :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기간('16)48.1일 → ('18)43.2일 → ('22)30일 이하

- 빅데이터 기반 업무프로세스 혁신
- 구조·구급데이터, 도로·교통데이터, 인구데이터 등 빅데이터 융합·분석으로 지역·시간대별 구급차 배치, 119안전센터 입지 최적화

2-3 사회적 가치 중심 공공부문 성과평가 전면 개편('18)

○ 기관평가에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 및 배점상향

- (적용대상) 중앙부처(정부업무평가), 지자체(합동평가·생산성평가), 국가·지방 공공기관(경영평가)
- (지표추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평가지표 개발(안전, 환경, 복지, 참여 등), 평가부문별 특성화 지표 추가
* 지표: 고객·주민참여, 일자리, 윤리경영, 노사상생, 안전, 지역공헌, 약자배려, 친환경 등
- (배점상향) 사회적 가치 평가배점 상향 조정
* (국가공기업) 공기업 : 30~35점 → 40~45점, 준정부기관 : 45~50점 → 58~63점
(지방공기업) 16~27점 → 35점
※ 예시: 기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17.12월)

(단위: 점)

공기업 = 준정부		공기업	≠	준정부
경영관리 (50)	사회적 책임 등(19)	경영관리 (55)	→	경영관리 (45)
	일반 경영관리(31)	사회적 가치(30)		사회적 가치(28)
주요사업 (50)	안전·환경 등 (공10~15/준25~30)	주요사업 (45)	→	주요사업 (55)
	기타 주요사업 (공35~40/준20~25)	사회적 가치 (10~15)		사회적 가치 (30~35)
		기타 주요사업 (30~35)		기타 주요사업 (20~25)

2-4 승진 및 성과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18)

○ 고위공무원단 승진 및 성과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 승진 시 평가역량 6개 모두에 사회적 가치 요소 반영

* 평가역량별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예시

역량	평가지표
문제인식	국가·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고려
전략적 사고	공공이익을 고려한 대안 선택
성과지향	공공성 평가요소 고려
변화관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변화주도
고객만족	소수의견 적극 청취·소통
조정통합	균형적 시각에서 판단

- 성과계약 시 조직 계획(임무 및 전략목표)에 반영된 사회적 가치 관련 사항을 개인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에 반영('19)

○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보상체계 확립

- 사회적 가치 확산 관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사혁신 수준 진단지수'에 기관별 실천계획 및 추진실적 반영
-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반영한 부처별 성과평가계획 수립, 부서 성과급 활용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유도
-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 기관 및 개인 포상, 인센티브 제공

전략 2.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



과제3 :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정책 제안, 민원 수준의 참여, 소수 전문가 위주의 참여방식을 개편하여 공공서비스를 국민과 함께 생산하고,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참여를 확대

3-1 국민 토론 광장, 광화문1번가 상설 운영('18) 중점

○ 범정부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 구축·운영('18) 해커톤

- '광화문1번가'를 공공속의의 장(場) '국민참여플랫폼'으로 개편
 - 국민의 아이디어 제출공간이던 광화문1번가를 정부-국민간 토론을 통해 실제적 결과로 도출하는 '공공속의의 장'으로 전면 개편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참여방식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참여할 수 있는 대표창구로 운영
- 온라인 광화문1번가 구축, 기관별 참여기제와 연계한 대표창구로 운영('18.7월),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음
 - * 국민생각함·국민신문고(권익위), 청원(BH) 우선 연계 → 각 부처·지자체 참여기제 단계적 연계 / 오프라인 광화문1번가와 연계하여 토론·숙의절차 진행
- 오프라인 광화문1번가를 광화문 정부청사별관에 구축, 온라인을 통해 도출된 의제를 국민과 토론하는 '국민 토론 광장'으로 상설운영('18.5월)

* 온-오프라인을 상호 연계, 공론의 장으로서의 효과 극대화

- 토론 전 : 온라인에 토론 주제 공고, 참여자 모집, 사전 의견수렴 실시
- 토론 중 : 오프라인 토론 진행 중 온라인에 토론 중계, 실시간 의견달기
- 토론 후 : 온라인에 토론결과, 토론 참여기관의 정책반영결과 공지 등

	
오프라인 광화문1번가 : 공론의 장	온라인 광화문 1번가 : 통합 참여플랫폼

○ 국민·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 국민참여예산제 본격 도입, 예산국민참여단 구성·운영
 - * 국민사업제안(3~4월) → 각 부처 요구 시 참여예산사업 포함(5월) → 예산국민참여단 사업논의(6월) → 국민선호조사(7월) → 정부예산안 반영, 국회 제출(9월)
- 주민참여예산사업 비중 확대, 유형별 우수사례 공유·확산
 - 주민참여 범위를 모든 예산과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산 설치 근거 마련(「지방재정법」)
 - 매년 유형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우수 지자체 선정,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 부여

○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확대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 주민·전문가가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국민감시단' 광역지자체별 신설
 - * 시·도별 「(가칭)예산바로쓰기 시·도감시단」 신설 구성 추진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중앙) 예산낭비대응 장려금 최대 지급한도 2배 확대(300→600만원), 낭비사례 대국민 공개 강화
 - (지방) 낭비기관 교부세 감액, 우수 신고·처리자 인센티브(표창) 확대, 낭비사례 대국민 공개 강화

○ 국민참여 법령심사 및 참여형 평가 확대

- 국민적 관심이 높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의 심사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 제시
-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지표개발부터 실제 평가까지 전 과정에 반영하는 '국민참여형 평가' 확산

○ 공청회 및 청원 제도개선('18)

- 국민들의 공청회 청구권 신설 및 중립성·객관성 보장
 - * 현재 공청회 개최 권한은 정부에게 부여(「행정절차법」 '18년 하반기 개정)
- 온라인·집단 청원 법적근거 마련, 일정 인원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는 기관장이 직접 답변하여 정책에 반영(「청원법」 개정안 의원발의('17.11월))

○ 주민 참여제도 개선('18)

- 주민투표 대상 확대, 청구절차 및 개표요건 개선
 - * 「주민투표법」 개정안 제출('18.12)
- 자치단체별 인구편차 등을 고려하여 주민소환 청구·개표요건 합리화
 -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18.12)

- 온라인 조례 제·개폐청구제 실행, 조례 제·개폐 청구요건(서명인수) 완화
*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18.12)

○ 국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생산 기제 확산

- 국민-정부 간 ‘협약(Compact)’제도 도입 검토
 -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책개발 및 공공서비스 공동생산에 대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약 체결 추진 검토, 연구용역 시행('18)
 - * (참고)영국 대협약 : 중앙·지방정부-시민사회(65개 대표)가 함께 투명한 공공서비스 디자인, 시민사회 독립성 존중 및 지원강화, 취약계층 고려한 사회정책 등에 대해 협약체결
- 국민이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참여 프로젝트’추진
 - 생활 속 불편과 개선사항을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창의적 해결방안을 기획·집행하는 사업 추진

3-3 국민의 뜻을 섬세하게 살피는 열린정책 소통체계 구축('18)

○정책 도입 시 체크리스트를 통해 꼼꼼히 사전 점검

- 이해관계자 및 부처 간 논란이 있는 정책 및 파급효과가 큰 정책 대상, 사전에 관련 집단과 충분히 소통하고 정책에 반영
 - 필요시 정책숙려기간을 도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범 운영
* 이해관계자가 소수라도 의견 차이가 큰 경우 체크리스트 적용
- 정책에 영향을 받는 국민·이해관계자, 관계부처·전문가·국회·언론 등 집단별 찬/반 의견 체크 및 대안 기재
 - * 법령상 필수절차(공청회, 입법예고, 사전설명회 등) 이행 여부도 확인
- 전자문서 시스템에 반영하여, 보고서 기안 前 필요항목 사전검토
 - * 체크리스트 표준안 마련('18.3), 전 중앙부처 시행('18.4)

◆ 각 기관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국민 참여 시책 발굴 예정

〈 참고 : 부처별 국민 참여 시책(예시) 〉

정책단계	참여시책
<p>정책제안 국민소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체인에 기반한 모바일 의견수렴 시스템 도입(과기부) • ‘국민외교센터’ 구축·운영(외교부) • 외국인 ‘이민정책 참여단’ 운영(법무부) • ‘국민참여플랫폼’ 구축·운영(행안부) • 오프라인 ‘농식품 生生현장 중계실’ 운영(농림부) •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상상대로(想像大路)’ 운영(국토부) • 국민참여소통 플랫폼 ‘New Window’ 구축(해수부) • ‘국민청원 검사제’ 도입, ‘식의약 어벤저스’ 운영으로 소비트렌드·이슈 발굴(식약처) • SNS 의견에 대변인·담당자·부서장 직접답변, 정책반영 (방사청)
<p>정책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참여예산제 도입(기재부) • 시도교육청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창구 마련,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도입, 정책소통 자체점검표, ‘청년고용정책 참여단’ 운영 (교육부) •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개혁 2.0,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국방부) • 주민참여예산제 확산(행안부) • 대형 유통점포 출점 결정 시 주민참여 확대(산업부) • 국민참여 입법예고제 도입(복지부) • ‘2030성평등 정책추진 참여단’ 구성(여가부) • ‘국민숙의제’ 및 ‘국민의견반영서’ 도입(방통위) • 국민참여 법령심사제 실시(법제처) • 수요자 참여형(밥맛검정단) 지역맞춤 품종 개발(농진청)
<p>정책집행· 문제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 운영(법무부) •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국민참여 안전점검단, 국민디자인단(행안부) •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환경부) • 지역사회 공동육아 돌봄 공동체 확대(여가부)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국토부) •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 항만재개발 ‘국민 프로슈머’ 도입(해수부) • 시민감시관 통한 부패 취약분야 모니터링, 근로자·사업자·세무전문가 참여하는 ‘바른 세금 지킴이’ 운영(국세청)
<p>정책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국민참여 확대(기재부) • 정부혁신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국민참여 확대(행안부) • 정책평가 시 정책만족도 비중 확대, 시민참여 현장평가단(국토부) • 문화재정책고객단 도입, 조직성과평가 연계(문화재청)

※ 상기 사업은 예시이며, 기관별 정부혁신 실행계획(‘18.2)에서 발체

과제4 :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정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국가독점, 공급자 관점의 양 중심 공개 방식을 전환하여 주민 편의 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국민 삶과 밀접한 정보·데이터 대폭 개방

4-1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18)

중점

○ 주차장, 회의실 등 편의시설 주민 개방 확대('18)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기관운영에 지장 받지 않는 범위에서 공휴일 등에 국민에게 개방
 - '전국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시
 - * ('18)일부지역(전주·시흥·김해) 대상 시범사업 실시, 지도형태로 공유자원 현황제공 → ('19) 단일 포털 구축, 전국 공공자원 실시간 예약·결제서비스 제공
- 국유지 내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하여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등 공익 목적에 활용
 - 도심 내 위치한 노후청사를 「공공청사+수익시설+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
 - * 청년주거 공유공간, 수익시설, 공공임대주택, 예술창작공간 등
 - * 선도사업 추진 :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등 3건('18.상), 부산남부경찰서 등 5건('18.하)

○ 국민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22)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기본인식)	✓ 공공데이터는 정부의 전유물	✓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자산
(개방방식)	✓ 선택적 개방	✓ 개인정보 등 제외 원칙적 개방
(구현가치)	✓ 경제적 가치	✓ 경제적 가치+사회적 가치

- 네거티브(Negative) 개방원칙* 강화로 공공데이터 개방률 90% 달성
 - *국가안보·개인정보 등 제외 전부 개방, 전 기관 보유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실시
- 안전·환경 등 국가 중점 데이터 128개* 및 혁신성장 지원 신산업 핵심데이터 100개** 개방
 - *환경영향평가데이터, 수질데이터, 암검진데이터 등 / ('17)48개→('22)128개
 - ** 자율주행차(신호등위치정보·도로안전정보), 스마트시티(교통정보·시설물안전관리정보) 등

-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부터 자금지원, 해외진출 등 창업 쏠 단계에 걸친 민·관 창업혁신 종합 지원
*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기술보증기금·코트라·한국기업데이터·데모데이·한국엔젠투자협회 등 8개 기관 민·관 협업
- 특정 소프트웨어(한글·엑셀)에 종속되지 않는 ‘오픈포맷’ 및 데이터 개방 표준서식 확대 등 품질관리 강화
- 공공데이터 소재·연관관계를 시각화한 ‘국가데이터맵’ 구축·공개, 개방요구에 신속히 피드백(10일→3일)하는 ‘데이터1번가’ 확대 운영

〈18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분야(29개)〉

영역	개방 데이터
혁신성장동력 육성 (6개)	자동차종합정보(교통안전공단), 인공지능 의료영상 소재정보(심평원), 자연어 인식기반 언어음성정보(ETRI), 스마트시티 교통데이터(부산광역시), 자율주행 영상판독DB(자동차부품연구원), 교통신호현시정보(경찰청)
사회안전망 강화 (7개)	공공시설물 안전 정보(시설안전공단), 식품안전관리인증정보(식품안전관리인증원), 침수흔적도 정보(한국국토정보공사), 지능형 교통사고 분석 정보(교통안전공단), 먹는샘물 수질정보(환경부), 암검진자정보(코호트)(국립암센터), 임상연구정보(질병관리본부)
정부 투명성 강화 (5개)	중소기업지원현황정보(중소벤처기업부), 선거종합정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비자 안전정보(공정거래위원회), 미디어/광고 소비행태 조사정보(KOBACO), 한국아동패널조사정보(육아정책연구소)
일자리 창출 (6개)	전력사용량 데이터(한국전력), 시기농업예측정보(농림축산식품부), 농업활동지원정보(농림축산식품부), 참조표준데이터(표준과학연구원), 해외시장 진출지원정보(무역투자진흥공사), 부보금융회사종합정보(예금보험공사)
사회적 가치 확산 (5개)	해양환경/생태분야 정보(해양수산부), 환경평가모니터링정보(환경정책평가연구원), 민원분석정보(권익위원회), 도시재생 종합정보(국토교통부), 푸드뱅크 정보(사회복지협의회)

4-2 누구나 알기 쉬운 ‘국민세금 사용명세서’ 공개(18)

○ 중앙정부 예산·결산 정보공개 확대 및 맞춤형 정보 제공

-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제공, 지출정보 세분화 및 공개주기 단축
* 재정정보공개 홈페이지 개편(18년 상반기)
** (현행) 단위사업·월별 → (개편) 세부사업·일별

- 국민, 연구자 등 정책 수혜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확충
* 수혜자 맞춤형 홈페이지 개편, 맞춤형 수혜정보, 빅데이터 활용 재정사업 분석 등

시행 전	시행 후
단위사업·수치위주 공개	세부사업, 그래프·인포그래픽 추가
월별 단위 공개	1일 단위 내역 공개
외부 접근성 미흡	키워드 검색 확대, 외부 DB 연계

* ('18.7월) d-Brain 사용 기관 53개, ('19.7월) d-Brain 미사용 기관 15개 적용

○ 지자체 결산서 개선

- 회계용어 순화(국립국어원 협업), 챗봇 등 편리한 방식으로 서비스
- 결산 핵심정보 10여종 대상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공모
* 17개 광역시·도 등 희망 자치단체 작성, 행안부(지방회계통계센터) 컨설팅

4-3 식품, 안전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정보 집중 공개('18)

○ 국민이 원하는 정책실명제 운영 강화

- '국민신청 실명제' 도입을 통해, 그간 기관에서 임의로 정했던 정책실명제 사업을 국민신청을 거쳐 선정하여 국민수요 반영
* 국민신청 → 기관별 심의위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선정
- 국정과제의 경우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의무화
- 최종결재자까지 실명공개 범위 확대(기존 과장급까지 → 결재자 전원)

〈예시: 최종 결재자가 장관인 경우〉

시행 전: 과장까지 실명공개		시행 후: 장관까지 결재자 전원 실명공개					
담당자	BBB 과장 AAA 사무관	담당	과장	국장	실장	차관	장관
		AAA	BBB	CCC	DDD	EEE	FFF

○ 식품 성분 정보공개 확대

- 국민 다소비·다빈도 177개 식품별 유해물질 함유량(19종) 공개(~'22)
 -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식품별 유해물질 함유량 변화 정보를 지속 공개* 하여 국민의 식품 선택권 및 막연한 불안감 해소
 - * ('18) 곰팡이독소 → ('19) 곰팡이독소, 다이옥신, PCBs → ('20) 곰팡이독소, 다이옥신, PCBs, 벤조피렌 → ('21) 곰팡이독소, 다이옥신, PCBs, 벤조피렌, 3-MCPD, 멜라민 → ('22) 곰팡이독소, 다이옥신, PCBs, 벤조피렌, 3-MCPD, 멜라민, 중금속

-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닭(계란)·오리의 사육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가축질병, 축산물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이력추적이 가능한 유통경로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19~) 등

○ 국민 관심 안전정보 공개 확대

- 재난안전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공개 확대(4대→8대분야)
 - 8대 분야 187종, 안전시설 위치정보 44종, 미세먼지 등 실시간 정보* 11종
 - * 교통돌발정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방사능, 오존, 통합환경지수, 이산화질소, 자외선, 식중독지수, 동파가능지수
 - 내 주변의 안전시설(대피소, 경찰처, 소방서 등) 정보를 지도로 제공 (30여종)

기존분야	주요내용	추가분야	주요내용
①교통안전 (13종)	• 등갓길사고, 하갓길사고, 무단횡단, 횡단보도사고 등	⑤시설안전 (14종)	• 시설안전등급도, 주유시설현황, 전기화재발생통계 등
②재난안전 (13종)	• 홍수범람위험도, 해안침수 예상도, 화재발생통계(건수), 지진발생이력 등	⑥산업안전 (11종)	• 산재지정 의료기관, 건설공사 현황, 산업재해통계
③치안안전 (45종)	• 치안사고통계, 안전녹색길 (오전·오후·저녁)	⑦보건안전 (56종)	• 자살발생, 식중독 등 질병 및 전염병 발생현황, 축사·통제초소 정보
④맞춤안전 (19종)	• 어린이보행사고, 스쿨존사고, 여성운전사고, 노인보행사고	⑧사고안전 (16종)	• 추락/낙상사고 발생통계,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시설점검이력 정보

- 지자체별 안전수준에 대한 비교 가능한 지역안전지수(7개 분야*) 제공
 - *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 위해지표(사망 등 사고통계), 취약지표(위험통계), 경감지표(경감통계)로 구분하여 산출
 - * 지역안전지수 = 100 - (위해지표+취약지표 - 경감지표)
- 470개 생활화학제품 모든 성분 정보(성분별 기능, 유해성 정보) 공개
 - 제품 내 성분, 성분별 기능 및 유해성 자료 등 대국민 공개(환경부 초록누리 홈페이지, 기업 홈페이지)
 - 국내유통 화학제품(화장품, 의약외품, 농약, 위해우려제품 등) 정보를 통합하여 수요자 맞춤형 제공

◆ 기관별 자원공유 및 정보공개·데이터 개방 관련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

〈 참고: 부처별 공공자원·데이터·정보 개방 사업 〉

구분	주요정책
공공시설· 자원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시설(부대 내 체육·문화시설) 지자체·민간 개방 확대(국방부) • 공공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지역사회 개방 확대(여가부) • 민자 역사(서울역 등) 창업공간 등 공공시설로 활용(국토부) • 향만 유희부지, 등대 유희시설 시민친화(문화) 공간으로 제공(해수부) • 도시 지역 내 국유림을 마을공동 산림텃밭으로 개방(산림청) • 과천청사 유희시설(주차장, 체육시설 등) 일반시민에 개방(행안부) • 대학생 기숙사 편의시설 주민 개방(교육부) • 공공WiFi 주파수 확대(과기부) • 댐·수도 등 공공시설 민간에 테스트베드 제공, 지식재산권 이전 확대(국토부) • 비국방분야 R&D 지식재산권 민간기관과 공동 소유(방사청) • 창업자·스타트업 대상 지식재산 데이터 무상 지원 확대(특허청)
공공데이터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국가데이터맵 구축(행안부) • AI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 구축(과기부) • 시 기반 농업예측 정보 개방(농식품부) • 동물유전체 정보 빅데이터 공개(농진청) • 빅데이터 활용 입찰, 계약 등 조달데이터 제공(조달청) • 산림 빅데이터 활용 귀산촌인, 임업인 맞춤형 조림지도 제공(산림청) • 통계 빅데이터센터 설치 확대(통계청) •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콘텐츠 강화(기상청) • 생애주기별 교육 공공데이터·공시정보 개방(교육부) • 행복도시 지상·지하 시설물 3차원 공간정보 구축·개방(행복청)
국민 삶과 밀접한 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폐기물, 석면건축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공개(환경부) • 세계 최초 닭·오리·계란(가금류) 이력정보 제공(농식품부) • 식약품 안전조사 정보를 소비자단체, 환경단체와 공유·공개(식약처) • 출동 소방차 정보 119신고자에게 실시간 제공(소방청) •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알림 서비스 확대(경찰청) • 대중교통 데이터 공개(국토부) • 납세자 유형별 거래지출 패턴 등 분석하여 납세 안내정보 제공(국세청) • 누구나 알기 쉬운 수요자중심 예산·결산, 사업성과보고서 공개(기재부) •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클린아이) 대국민 공시 강화(행안부)

※ 상기 사업은 예시이며, 기관별 정부혁신 실행계획('18.2)에서 발췌

과제5 :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와 소통 부재로 인한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제도 및 협업시스템을 개편하고, 국가정책조정기능을 강화

5-1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인사·조직·평가·시스템 개편('19)

중점

○ (인사) 고위공무원단 및 전문직 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 주요 국정현안 추진을 위해 전문성, 부처간 갈등 조정 및 소통·협업이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직위 대상 ‘(가칭)전략적 협업 직위’를 도입
 - * 주요 국정현안과 관련해 부처간 이견·갈등이 크거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직위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정부('04~'06)에서 32개 직위를 대상으로 시행한 바 있음
 - * 대상직위 선정(~'18. 6월) → 대상자 선발 및 교류 추진(연중)
- 재난관리, 국제통상 등 핵심 분야 전문성 강화 및 협업촉진을 위해 부처 간 전문직 공무원* 2인 이상 동시 교류 활성화
 - *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분야를 설정하고, 해당 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 인사제도
 - * 전문직공무원 정원 통합관리는 기존 6개 부처의 성과평가 후 단계적 확대 검토

○ (조직·평가) 협업정원제 및 협업·조정평가 도입

- (정원관리) 부처 간 인력운영 칸막이를 해소하여 정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협업정원제’ 도입
 - 정책대상과 수행 기능·서비스가 유사하여 부처 간 긴밀한 정책 조율과 협력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에 인력을 상호 파견
 - 협업정원 대상업무, 파견부처, 직급 등을 직제에 규정
 - * 정부조직관리지침 개정('18.3월)
 - * (예시)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교육부(교육일자리총괄과) 산업부(산업일자리혁신과) 등 청년일자리정책 관련 부처 간 인력 상호파견
- (평가) 부처의 협업·조정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는 ‘협업·조정 평가’ 도입('18)

○ (시스템) 기관간 공동기안·결재시스템 ‘클라우드 온-나라’구현('18)

- 기관 간 문서 공동기안·결재시스템 ‘클라우드 온-나라’ 전 부처 확산
 - * 국방부, 방사청 등 폐쇄망 기관 제외 총 62개 기관 도입 예정('18)



- 국정과제 중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거나, 다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할 과제를 선별하여 공동결재 대상 기관·과제로 지정

* 예 : '국정과제 6-5. 개인정보보호강화'협업기관인 행안부-금융위-방통위 지정

5-2 칸막이 없는 “정부합동 원스톱 민원센터”구축('19)

○ 온·오프라인 원스톱 민원창구 구축

- (가칭)'정부합동 원스톱 민원센터'설치
 - 기존 민원처리·상담에서 더 나아가, 다수기관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상담하고 지원하는 센터 설치(서울, 세종 등) 검토
 - ※ 현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는 고충민원 등 일부 상담 기능 수행 중

(가칭)'정부합동 원스톱 민원센터' 설치 검토 (서울, 세종 등)



'원스톱 민원 상담' 지원 추진



※ 센터의 기구·소속·관계부처 파견 등은 행안부, 권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추진

- 온라인 '원스톱 민원 상담창구' 운영, '국민콜 110'연계 확대
 - * 국민신문고 통합민원 상담창구 개설, 타 부처 서비스 국민콜 110 연계 강화
- 시·군·구 인허가민원 원스톱 전담창구 전국 확산
 - * ('17) 70% → ('18) 80% → ('19) 85% → ('20) 90% → ('21) 95% → ('22) 100% 완료

5-3 성과제고와 정부신뢰를 위한 부처내 부처간 협업 강화('18)

○ 부처 내 / 부처 간 협업강화

- 협업과 조정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 집중관리
* 주기적 업데이트 및 점검, 협업 장애요인 해소 등 필요조치 적기 시행
- 부처 내 협업과제 선정 및 추진 적절성 등 상호점검 체계*운영, 부처간 이견은 주관부처가 1차적으로 책임 대응
* 차관(또는 기획조정실장) 주재·주요 국과장 + 대변인 등 참석
- 현안조정회의, 관계장·차관회의 등 정책조정회의체를 통한 문제해결 및 총리-부총리 협의체 신설(월1회)
- 정책홍보전략회의(매주)를 통해 주요정책의 발표내용, 발표시기 등을 사전 점검·조율하는 등 범정부 홍보협력을 통한 정책홍선 방지

◆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기관별 타부처·민간 협업을 위한 시책 발굴 예정

전략 3.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과제6 :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채용비리, 부정부패, 성폭력 등 공직 내 신뢰를 저하시키는 구습을 타파하고, 혁신의 주체로서 스스로 개혁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6-1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관용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18)

중점

○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공공분야 채용비리 원천차단('18)

- 채용비리 발각시 수사외뢰 등 엄정조치, 부정합격자는 퇴출
* 접수조작 등 부정행위 발각시 부정합격자는 즉시 업무배제 후 직권면직 등 퇴출, 조작 가담자는 수사외뢰
- 한시적 합동대책본부를 권익위 중심의 지속적 관리체계로 개편
* 분야별(공기업, 지방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사항 이행점검, 현안 사안 대응 등 추진(2팀1신고센터)
-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수사·징계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점검
* 후속조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기관을 점검하고, 미조치 발생시 현장실사 추진, 청렴도 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여 이행력 확보
-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제도개선과 연계
* 일반국민 상담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수사외뢰, 주요 비리유형 및 수법, 기관별 현황 등을 관계기관에 환류 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계
- 정부·공공부문 이외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정한 채용과정 모델 개발·확산
* 일정, 인원, 평가기준 등 채용 전 과정에 대한 모델을 연구·개발하여 공공부문에 적용토록하고 민간에 확산을 유도

○ 공직사회 고질적 부패(금품수수, 부정청탁) 엄중 처벌('19)

- 금품수수·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수행 시 중징계 및 형사처벌
*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서 받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공직에서 배제, 형사고발 의무화
- 부패 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봐주기 관행 근절
* 현재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던 금품수수 징계 감경 제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을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직자 전체로 확대 추진(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반영)

○ 공공기관의 투명성·책임성 강화('18)

- 부패정보 공개 확대 및 기관장 책임성 확보
 - * 기관별 부정청탁 내용·조치사항 공개, 공공기관 청렴지도 제작·배포,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제 실시
- 청렴 MeToo 운동으로 내부신고 활성화
 - * 100일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책임감면 확대, 대리인 신고제도 도입

○ 공직을 악용한 사익추구 행위 근원적 차단('18)

- 부정한 사익추구행위 방지 제도 본격 시행
 - *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부하직원 사적 이용위반 시 징계, 직무정보를 활용한 가상통화·주식투자 금지
-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간 접촉 관리 강화
 - *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외부인 등록 관리(공정위), 대관업무 담당자 접촉 보고 의무 부과(금융위)

○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개입 등 관피아 부패 해소('18~)

- 퇴직공직자의 안전, 방위산업 분야 취업제한기관 확대
 - * 일정규모(자본금 10억,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이하 영세업체라도 제한기관 포함
- 직무관련 퇴직자 사적 접촉(골프, 여행 등) 시 사전 신고 의무화
- 퇴직공직자 부정청탁·알선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 * 당사자 외 누구나 신고 가능, 신고자 보호를 위한 원상회복조치 및 포상금 지급

○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근절('18)

- 기업에 대한 자금출연 강요 등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갑질행위 징계
 - * 직원 채용청탁, 특정업체 계약체결 요구 등 민간 부정청탁행위 금지
-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제도 입법 추진
-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특별 신고기간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6-2 성희롱·성폭력 걱정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18)

중점

○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관리체계 구축

- 모든 성폭력 범죄자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당연 퇴직, 성희롱 등으로 징계 시 실국장 보직제한 제도 도입 검토
- 사건 은폐, 2차 피해* 시 관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 기관명 대외공표, 시정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임용권자 통보, 징계 등
-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이행상황 및 사건 발생기관 점검, 후속조치 모니터링 등을 위한 「법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점검단」 설치('18.3월~)
 - * 단장 : 여성가족부 차관, 관계부처 합동

○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 외부 전문가를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ombudsman’으로 배치·운영
- ‘컨설팅 위원단’을 구성, 사건발생기관 등에 파견하여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지원
-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 의무로 규정, 보직이동 등 보호조치

○ 특별점검 및 신고·상담 활성화

- 성희롱·성폭력 관련 부당인사행정을 제보할 수 있는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 (온라인 창구, 인사신문고 활용)’운영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 특별점검 실시(~'19)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설치·운영('18.3월~, 100일간)
* ①관계기관에 접수사건 조치요청, ②사건발생기관에 재발방지 대책수립 요청

과제7 : 국민중심 4대 행정혁신(데이터·창의·규제개혁·낭비제로) 실행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혁신, 창의행정, 규제개혁 및 행·재정 낭비 제로’의 4대 행정 혁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 업무 추진 및 서비스 제공

7-1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서비스 혁신('18)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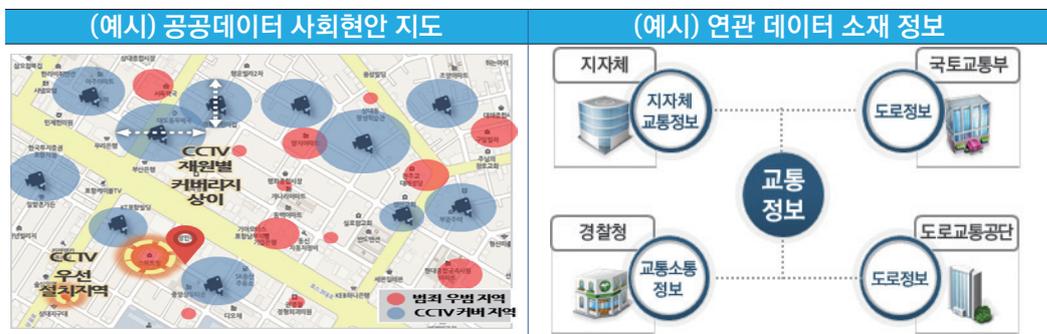
○ 공공부분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다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

- CCTV 사각지대 분석·구급차 골든타임 확보 등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빅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고품질 공공서비스 일괄 제공
 - 구급차 도달 취약지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구급차 우선배치 지역을 도출하고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 민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조기에 인지
 - CCTV 사각지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CCTV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고 치안서비스의 품질 제고

○ 국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문제 해결 및 공공성 강화

- 국민과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국민참여지도(Community Mapping) 제작 및 공공서비스의 공동 개선
 - * (예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공공데이터를 지도에 표현하고, 일반국민도 함께 참여해 지도를 보완·완성하여 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정보 제공
- 국민 누구나 사회현안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연관 공공데이터 소재 안내
 - * (예시) 교통체증 문제 → 교통사고 데이터, 가변차로 선정 데이터, 신호 데이터 소재 안내

〈 사회 현안해결 공공데이터 지도 서비스(안) 〉



- 공공데이터를 활용, 복잡한 사회문제를 국민이 제안하고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 시범 추진

* (예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미세먼지 해결 프로젝트, 가뭄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

○ 첨단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활용 생활 밀착형 맞춤형 서비스('18)

- 하나의 앱으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안심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국공통 '안심귀가 서비스'체계 구축('18년 시범)
 - * 전국 통합관제센터 연계, 치매노인·저소득층 자녀도 안심단말기를 통해 서비스 제공
- 가스·전기·수도 사용량 및 움직임·화재 센서 등을 활용한 '독거노인·취약계층 안전·건강 이상상황 관리서비스' 확대('19년)
 - * 응급상황 정보를 생활관리사·응급안전요원에게 동시 전송

○ 종이 대신 모바일로 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19)

- 「정부24」를 통해 국민 삶에 필요한 서비스·민원·정보 모두 제공
 - * 정부서비스 7만여 건, 법정민원 5천여종 민원, 주요정책정보 등 온라인 제공
- 각종 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등)를 모바일 기기로 열람·다운로드·활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 지갑' 개발
 - * 전자문서 발급·유통센터 구축('19)
- 우편·방문 대신 인터넷으로 공문을 주고받는 '문서24'를 모든 업무에 확산
 - * 연간 13.8백만건 문서접수, 1,390억원 비용 소요 / 현재 연구용역 등 5개 업무 활용
- 「모바일 행정서비스 종합 혁신계획」 수립('18)
 - * 모바일 정부24를 통한 공공서비스 대상 확대,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서 찾아주는 서비스 등

◆ 각 부처 및 공공기관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모바일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 사업 적극 발굴·확산할 예정

7-2 넓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 행정('18)

중점

○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벤처형 조직' 시범운영('19) **해커톤**

- 범정부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조직 구성
 - * 기관내 : 임시조직/총액인건비 지원(4·5급이하 팀장 가능) / 기관간: 별도조직·별도정원
- 선정된 아이디어를 한시적(1~2년) 기간 동안 정책·서비스로 구현, 대국민 서비스 개선, 현안 해결 등 성과창출 시 정규조직화 고려

○ 실패박람회 개최 및 실패경험 사례집 발간·활용 **해커톤**

- 정책, 공공사업 분야의 실패사례를 발굴·공유, 실패과정·원인 분석하여 재도전 및 극복기회를 제공하는 ‘실패박람회’ 개최
- 「재난유형별 대응사례집」을 발간하여 유사한 실수를 방지하고, 훈련 및 대응 매뉴얼 개선에 활용(18.3)

○ 적극행정 면책제도 실효성 확보(18)

※ (감사원 자체수립·시행) 감사운영 시 ‘적극행정 지원기능 강화^①’, ‘감사부담 완화^②’, ‘소통·협력체계 구축^③’ 등 개선과제 역점 추진(18)

- ① 감사원내 적극행정 전담 지원단 신설, 면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자체감사기구의 적극행정 면책(가이드라인, 면책사례집 제작·배포 등) 활성화 등
- ② 신산업분야 감사자제, 감사자료 제출부담 완화 등
- ③ 감사원-정부기관간 감사운영협의회, 수감불만 핫라인 개설 등 소통·협력 체계 강화

-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일정요건* 충족시 감면
 - *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 필요한 행정절차 및 보고절차를 거친 경우 등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18.상)
- 명백히 위법한 상관의 지시명령 이행거부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금지
 -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18.상)

7-3 국민불편·부담을 야기하는 규제혁파 및 행정·민원 제도 개선(18)

○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재설계

- 포괄적 네거티브(우선 허용, 필요시 사후규제)의 유연한 규제방식으로 전환,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신사업분야 임시허가·시범사업 허용
- 핵심선도 신산업 현장의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해소
 - *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핀테크·공유경제 등 신서비스

○ 국민 불편·민생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중심 혁파

- 생활밀착형 서비스, 국민 불편이 큰 분야 중심으로 전수 점검·종합 정비
 - * 주민·이용객 불편 영업, 관광·숙박 불편, 온라인 거래 저해, 개인·국공유지 활용 관련 규제
-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권한 지자체 이양 및 자율성 확대
 - * 중앙부처 협의·승인 절차 생략, 경미한 인허가 권한 이양, 지역별 맞춤형 차등 법령 규제

○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모델’전 기관 도입·확산(18)

- 정책수요자를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현장서비스 모델 확산
 - * (예) 찾아가는 현장노동청, 찾아가는 거리 상담, 농진청 찾아가는 수출현장 기술지원 등
 - ** (예) 중앙부처: 1現4廳, 지자체: 2現3廳 확산(現: 현장 찾아가기 /廳: 청사내 근무)
- 일선기관(세무서 등)의 민원환경·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해 국민행복민원실 확대

○ 민생·현장 중심 행정·민원 제도 개선

- 사회 취약계층 보호·지원·편의 강화를 위하여 아동·장애인·외국인 등 테마별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개선
- 분야별 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및 제도조사·연구, 온·오프라인 토론회*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개선
 - * ‘국민생각함’, ‘광화문 1번가’, ‘열린포럼’등을 통한 의견수렴, 테마별·권역별 토론회 개최

7-4 불필요한 행·재정낭비 제로시대(18)

○ 모바일 전자결재,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이용 확대(~22)

- 세종-서울, 국회 출장 시 등 언제·어디서나 업무처리 가능하도록 과장급 이상 간부대상 모바일 전자결재 및 GVPN 사용 의무화 추진(~22)
 - 국회 대기 등 사무실 밖 불필요한 업무시간 낭비를 감축, 일과시간 이외 긴급한 경우 업무처리 가능
 - * (모바일 전자결재)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e-사람, 모바일 온나라를통해 사무실 밖에서도 긴급한 결재, 메모보고, 유연근무 신청 등이 가능
 - * (GVPN) PC, 노트북으로 재택 등 원격 업무처리 가능

○ PC 자료저장 → 클라우드 저장소 활용 체제로 전면 전환 **해커톤**

- 범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G 드라이브’전 부처 이용 의무화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구축
 - 전 부처 ‘G 드라이브’시스템 구축 완료(19)
 - * 18년 39개 기관 → 19년 전 부처(국방부, 방사청 등 안보 관련 폐쇄망 기관 제외)
 - * 업무 시 생산한 모든 자료를 PC에 저장하지 않고, G 드라이브에만 저장하도록 업무용 PC 내 자료저장방지 SW설치
 - 세종시 이전 등 기관 사무실 이전 시 G드라이브 이용 의무화
 - * (17년) 인사처 이전시 의무 시행, (19년) 행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시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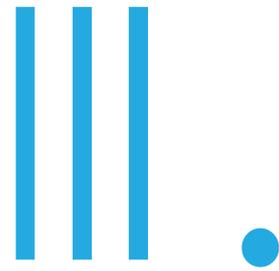


○ 스마트오피스 확산

- 행안부·과기정통부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청사 건물, 국회 등에 스마트 워크 센터 추가확충, 출장으로 발생하는 공백시간을 효율적 활용
- 타기관 공무원도 사용가능한 원격근무용 공유 공간 마련 추진
* 기관내 민원실, 도서관 등에 누구나 이용 가능한 원격근무용 공간(좌석, 컴퓨터, 책상, 프린터 등) 공유를 통해 출장·현장업무 수행

○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 강화

- 신규 행사축제 사전심사(민간위원 구성 심사위 운영), 모든 행사·축제 사후평가 실시, 예산편성에 결과반영 및 원가공개
- 지방채발행·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주요재정사업 평가* 강화
* 평가결과 미흡이하 사업 예산삭감 및 중단 등



새로운 정부혁신의 특징과 달라지는 모습

◆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자율적·상향적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p>국민 없는 혁신 ※ 전문가 위주 제한된 참여</p>	<p>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 과제발굴-계획수립-평가 전과정 국민참여</p>
<p>하향식 혁신 ※ 계획수립 → 시달</p>	<p>자율적·상향식 혁신 ※ 정부혁신 해커톤, 기관 자율평가 도입</p>
<p>행정 내부 혁신 ※ 내부시스템·프로세스 개선 집중</p>	<p>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혁신 안전·공동체 등 사회적 가치 실현</p>

◆ 말뿐인 혁신이 되지 않기 위해 정부혁신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22년에는
OECD BLI 10위권 진입
*10계단 이상 상승

- ① 다 함께 잘사는 나라 구현
: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BLI) 10위권 진입(~'22)
* '17년 29위(38개국 중)

신뢰받는 정부



'22년에는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 ② 국민께 신뢰받는 정부 구현
: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22)
* '17년 32위(35개국 중)

깨끗한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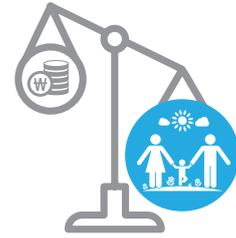
'22년에는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

- ③ 깨끗한 정부 구현
: 부패인식지수(CPI,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20위권 진입(~'22)
* '18년 51위(180개국 중)

1. 국민의 삶,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 동안 경제발전과 성장만 중시했다면



이제 안전시설 더 확충!
복지·환경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확대!



골든타임 놓쳤던
응급상황 신고 대처



112는 5분대 119는 6분대
신고 후 골든타임에 도착!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르는
복잡한 민원 창구



정부합동 원스톱 민원센터,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 원스톱으로 한 곳에서!



참여창구가
너무 많아 헷갈림



국민참여 대표창구
'광화문1번가'로 가면 됩니다.



어떤 제품,음식이 위험한지
알 수 없었음



470개 생활화학제품, 닭·오리·계란
이력정보 전부 알려드림

2. 공직사회,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15 : 1

남성중심 공직사회
여성 고위직
16명 중 1명꼴



여성 고위공무원 10명 중 1명
공공기관 여성임원 10명 중 2명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10명 중 4명



미온적 처방에 그쳤던
유명무실한
성폭력 접수·신고



성범죄자 벌금형 시 당연퇴직!
인사 불이익 신고 등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보호!



끊이지 않는 공직
부정부패 비리사건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원스트라이크 아웃”
부패인식지수 51위→20위권 진입



대응하기 어려웠던
출장 중 현안 처리



앞으로는 모바일결재,
원격근무로 실시간 대응!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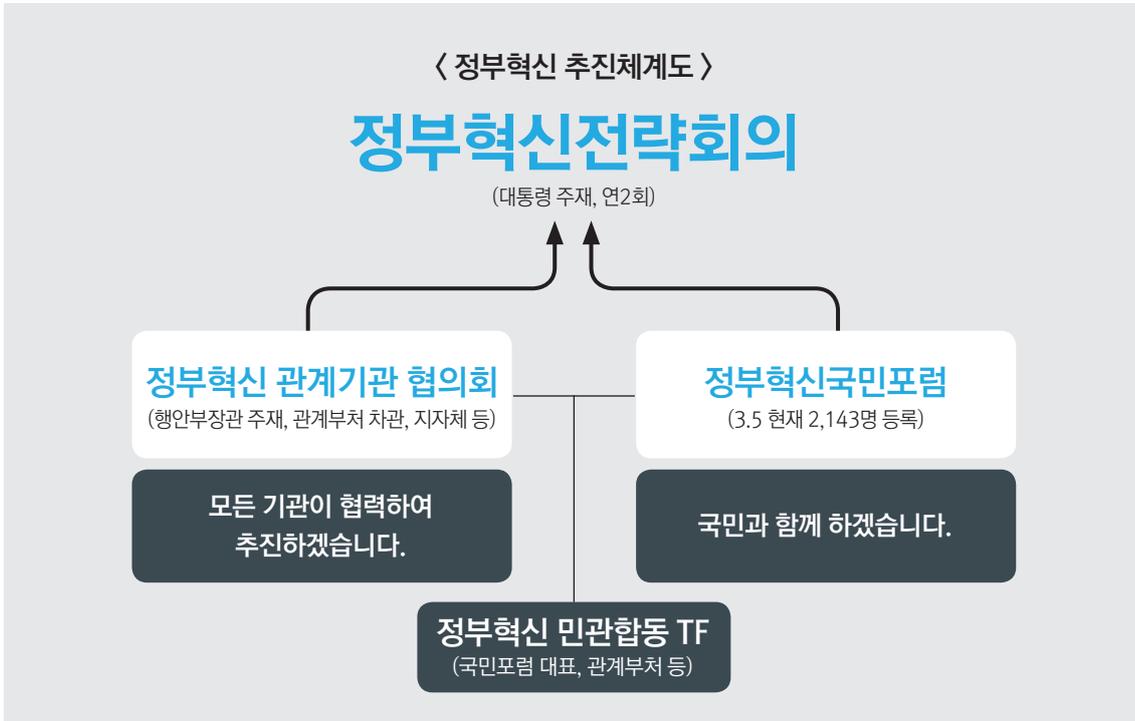
혁신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기본방향

- 기관의 자율적 혁신관리 및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혁신역량 강화
- 국민 삶 개선과 연계되도록 국민과 함께 과제발굴, 평가, 성과관리 추진

1. 추진체계

* 정부혁신 주체 :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행정기관, 국가·지방공기업 등 전 공공부문



○ ‘정부혁신전략회의’ 개최(연2회 이상)

- 기능 : 정부혁신 전략 수립, 혁신 성과점검 등 강력한 이행동력 확보
- 참여 : 대통령(주재),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장, 정부혁신국민포럼 위원 등

○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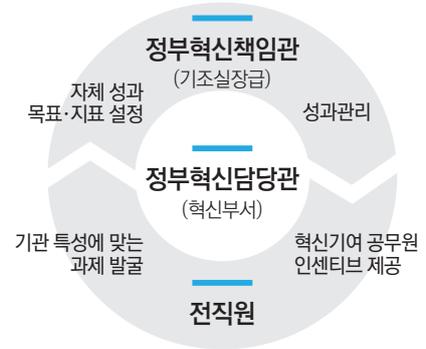
- 정부혁신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수시)
 - 기능 : 혁신 아젠다 선정, 다수 기관 관련 협의·조정 등
 - 참여 : 행안부장관, 기재부·교육부·국조실·권익위 차관, 인사처 차장, 관련 청와대 수석 등
- 정부혁신 민관합동 추진 TF 운영
 - 기능 : 국민 관점의 정부혁신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국민체감 성과관리 및 평가 등
 - 참여 : 국민포럼 대표, 행안부·기재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 정부혁신책임관회의 운영(수시)
 - 기능 : 기관별 핵심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 점검,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 참여 : 행안부차관(주재), 각 부처 및 시·도 정부혁신책임관

○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

- 정부혁신 계획수립, 아이디어 제안·토론, 기관별 실적점검, 국민평가단 참여(정부혁신 평가) 등 전 과정 주도적 참여
* 온라인 국민포럼 위원 2,256명(3.13. 현재)
- 정부혁신 민관합동 TF, 정부혁신전략회의 등 참석

○ 기관별 자율적 혁신 추진체계 구축

- 기관별 정부혁신책임관(기조실장급) 및 혁신부서 지정·운영
* 43개 부처 및 17개 시·도 정부혁신책임관 지정, 지자체 혁신담당부서 기능·인력 보강
- 기관 특성에 맞는 상향식 과제발굴, 성과관리,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운영
* 기관별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해커톤 개최, 싱크탱크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혁신** 동참 유도

2. 성과관리

○ 정부혁신 평가 실시

As-Is	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배점, 가감점 항목(±1) • 형식적 평가, 순위 매기기 • 하향식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표 및 배점 대폭 확대 • 실질적 성과관리, 혁신 수준 향상 • 자율형·상향식 평가 도입

- 새로운 정부혁신 방향과 과제를 반영하여 평가지표 재설계 및 비중 강화
- '18년 실적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기관,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 전 공공부문 평가 실시

○ 지속적 변화관리 추진

- 정부혁신 교육 실시
 - 각급 공무원 교육기관*에 정부혁신 교육과정 개설, 권역·기관별 자체교육 지원, 표준교재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부처 및 시·도 공무원교육기관 등
 - 간부급 토론회·워크숍 등을 통해 정부혁신 비전 공유·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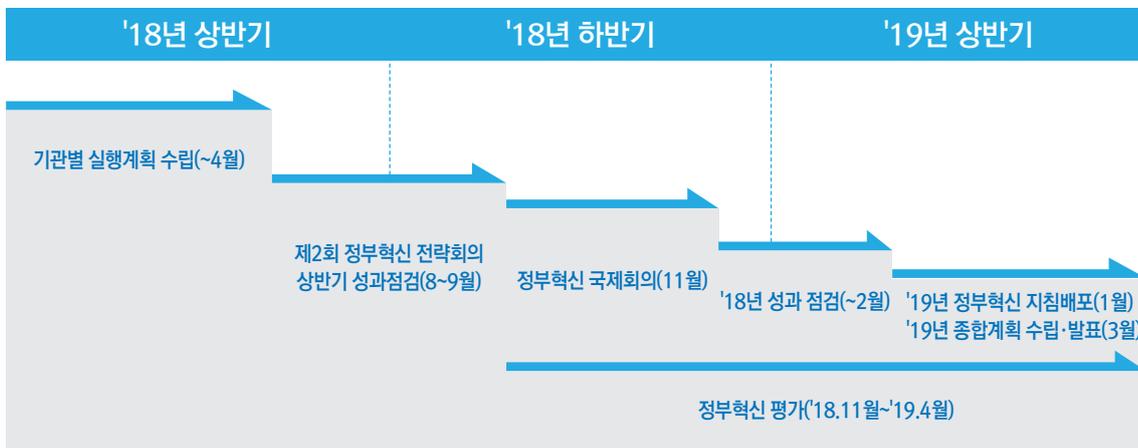
- 정부혁신 평가 미흡기관 및 신청기관 대상 정부혁신 컨설팅 지원
- ‘범정부 성과관리점검단’ 구성,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 정부혁신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인센티브 확대

○ 실시간 대국민 공개

- 정부혁신 과제 및 사업 등을 정부혁신 홈페이지 등에서 실시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개

3. 향후계획

○ 주요 추진일정



○ 정부혁신 중점 추진과제 시행

- 과제별 주관 부처에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등에 상정
* ('18.4월)‘공공데이터 혁신전략’, ‘열린정책 체크리스트 도입방안’ 등 국무회의 상정

붙임 1 사업별 주관부처 및 추진일정

연번	과제 및 사업	일정	주관부처
1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혁신 하겠습니다.		
1-1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재정 투자 확대		
①	국가 예산안편성지침에 사회적 가치 반영	'18	기재부
②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18	행안부
③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사회적 가치 관련 사업 신설	'18	기재부
④	일자리, 안전 등 관련 분야 예산 확대	'18~	기재부
⑤	교통시설특별회계 개선 검토	'19	기재부 국토부
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18	기재부
⑦	행정·공공기관 친환경차 비율 60% 달성	~22	산업부 환경부
1-2	재정사업 심사·평가에 사회영향평가 요소 반영		
①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 도입	'19	기재부
②	재정사업 평가 시 사회적 가치 항목 반영	'18	기재부
2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인사·조직·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	공공부문 여성 임용 목표제 10·20·40도입		
①	공공부문 여성 관리직 임용 목표 달성	~22	여가부
②	정부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 40% 달성	~22	여가부
③	정부위원회 비수도권 위원 비율 40% 달성	~22	행안부
2-2	경찰·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으로 안전 골든타임 확보		
①	현장민생중심 인력·조직 강화	'18~	행안부
②	인력운영 성과연동제 도입	'18~	행안부
2-3	사회적 가치 중심 성과평가 전면 개편		
①	정부업무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확대	'18	국조실
②	지자체 합동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확대	'18	행안부
③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확대	'18	기재부
④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확대	'18	행안부
2-4	승진 및 성과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①	고위공무원단 승진·성과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18	인사처
②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보상체계 확립	'18	인사처
3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3-1	국민 토론 광장, 광화문1번가 상설 운영	'18	행안부
3-2	예산·법령 등 핵심정책과정 국민참여 강화		
①	국민참여예산제 본격 도입	'18	기재부
②	주민참여예산제 비중 확대	'18	행안부
③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확대	'18	행안부
④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18	기재부 행안부
⑤	국민참여 법령심사 확대	'18	법제처
⑥	공청회 및 청원제도 개선	'18	행안부

연번	과제 및 사업	일정	주관부처
3-3	국민의 뜻을 섬세하게 살피는 열린정책 소통체계 구축	'18	행안부
4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열린정부가 되겠습니다.		
4-1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		
①	각 기관 보유자원 대국민 개방	'18~	전부처
②	국유지 내 노후 공공청사 개발	'18	기재부
③	국민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18	행안부
4-2	누구나 알기 쉬운 '국민세금 사용명세서' 공개		
①	중앙정부 예산·결산 맞춤형 정보제공	'18	기재부
②	지자체 결산서 개선	'18	행안부
4-3	식품, 안전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정보 집중공개		
①	정책실명제 운영 강화	'18	행안부
②	국민 다소비 식품 유해물질 함유량 공개	'18	식약처
③	닭, 오리 등 가금류 이력정보 공개	'19	농림부
④	생활안전지도, 지역안전지수 공개 확대	'18	행안부
⑤	생활화학제품 성분 정보 공개	'18	환경부
5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5-1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인사·조직·시스템·평가제도 개편		
①	고위공무원단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18~	인사처
②	협업정원제 도입	'18	행안부
③	협업조정 평가 도입	'18	국조실
④	클라우드 온-나라 전 부처 확산	'18	행안부
5-2	칸막이 없는 "정부합동 원스톱 민원센터" 구축		
①	'정부합동 원스톱 민원센터' 설치	'19	행안부
②	온라인 원스톱 민원 상담창구 운영	'19	권익위
③	국민콜 110 연계 확대	'19	권익위
④	시군구 인허가민원 원스톱 창구 전국 확산	~'22	행안부
5-3	성과제고와 정부신뢰를 위한 부처내 부처간 협업 강화	'18	국조실
6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6-1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도 관용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①	무관용 원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원천차단	'18	권익위 인사처
②	공직사회 고질적 부패 엄중 처벌	'19	권익위
③	공직을 악용한 사익추구 행위 근원적 차단	'18	권익위
④	퇴직공직자 취업·행위제한 강화 등 관피아 부패 해소	'18	인사처 권익위
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제재	'18	권익위
6-2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걱정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	'18~	여가부

연번	과제 및 사업	일정	주관부처
7	국민중심 4대 행정혁신 실행하겠습니다.		
7-1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①	공공부문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다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	'18	행안부
②	국민참여지도 제작 및 사회문제 공동해결 프로젝트	'18	행안부
③	첨단기술 기반 생활 밀착형 맞춤형 서비스	'18	행안부
④	종이 대신 모바일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 확대	'19	행안부
7-2	낮은 관행과 선례를 깨는 창의 행정		
①	벤처형 조직 시범운영	'19	행안부
②	실패박람회 개최, 재난유형별 대응사례집 발간	'18	행안부
③	적극행정 면책제도 실효성 확보	'18	(감사원) 인사처
7-3	국민불편·부담을 야기하는 규제혁파 및 행정·민원 제도 개선		
①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재설계	'18	국조실
②	국민불편 야기하는 규제 혁파	'18	국조실
③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모델 확산	'18	행안부
④	민생·현장 중심 행정민원제도 개선	'18	행안부
7-4	불필요한 행·재정낭비 제로시대		
①	클라우드 저장소 전 부처 확산	~'19	행안부
②	모바일 전자결재, GVPN 이용 확대	~'22	행안부
③	스마트오피스 확대	'18	행안부
④	지방재정관리제도 강화	'18	행안부

※ 각 과제별 주관부처에서는 해당과제 이행에 있어 관계기관들이 기관별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조치할 필요

※ 상기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및 사업 리스트는 정부혁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께 공개될 예정

전략 1.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 **안전·복지 정책**

-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말하는 소화기’보급<경기>
* 소화기·소화전에 음성장치를 부착하여 사용법 자동 안내
- 카라반을 활용한「이동형 119구급센터」도입<부산>
* 지도기반 단위면적당 5분 초과 출동 최다 분포지역 배치 추진
- 농·어촌 등 취약지역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 농·어촌 취약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전남>, 교통취약지역 100원 택시<전남>, 농·어촌 지역 등·하교 전용 택시·버스 운영<충남> 등
- 청소년에 대한 공평한 기회 및 정책 참여권리 제공
- 저소득층 아동 꿈사다리 공부방<전남>,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대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전북>, 아동 참여 놀이터 조성<충남>

○ **지역사회·공동체 활성화**

- 치매안심마을 ‘기억두드림’ 조성<충북>
* 치매인식개선 교육, 고위험군 기억 지키미, 치매가족 자조모임 운영
- 골목사랑방 조성으로 주민주도 골목자치 활성화<서울>
* 골목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하여 주민 주도 지역현안 문제해결
- 지역축제를 활용한 협업·소통의 마을 플랫폼 구축<충남>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시민 펀드 중심, 안산시민 햇빛 발전소<경기>
* 시민펀드를 통하여 시민 주도형 햇빛 발전소 건립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 미세먼지·소음 방지 녹색 숲 조성<경남>
* 주요 도로변, 학교 및 공장 주변 등 미세먼지 및 소음 다발지역에 녹색숲 조성
- 주택가 생활폐기물 관리자 지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충북>
* 생활폐기물 관리자로 동네 어르신 지정,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노인 일자리 창출

전략 2.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 정책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도시기본계획수립 시민계획단<인천>
* 시민계획단(100명) : 인천 미래비전 설정, 핵심이슈에 대한 회의, 시민제안서 전달
- 주민중심 성과관리평가 재설계<제주>
* 평가항목 단순화, 주민만족도 평가비중 강화(개인 및 부서 성과평가 반영, 후속조치)
- 주민세 전액 주민자치재원 환원<세종>
* '18년부터 주민참여 읍면동 예산협의회를 통해 주민이 필요사업 발굴하여 자율편성
- 시민참여 똑똑세종 실험실, 모바일 정책투표 '세종의 뜻'<세종>

○ 협력행정 구현

-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인폼(Inform) 시스템<울산>
* 스마트폰 단속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하여 CCTV로 어려운 사각지대 불법주정차 단속
- '특이차량 위치 알리미'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전북>
* 지자체-경찰서-교육청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특이차량 위치정보 실시간 전파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로드킬 바로신고 서비스('19)<충남>
* Tmap 등 내비앱 연계 로드킬 간편신고로 2차사고 예방 및 도로정비 개선을 제고
- 민관협업 관공서 시니어 택배사업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전남>
* 택배사 도청 택배 집하→어르신 각 부서에 배달→택배사에서 수수료 지급
- 민관 소통형 업무 협업 시스템 구축<제주>
* 협업과제 시, 타부서·외부기관과 사전 의견수렴부터 업무협약의 이력관리 및 자료 공유

○ 공공자원 개방 확대

- 공공자원(공원 등) 활용 청소년진로체험 프로그램 에듀-파크-런 운영<대구>
- 공유센터, 지식공유플랫폼(아리바다) 운영<광주>
- IoT기반 행복카셰어, 공용차량 소외계층 공유서비스 제공<경기>
* 주말, 공휴일 유희 공유차량 대상, IoT활용 차량관제 서비스 제공

전략 3. 넓은 관행을 혁신하는 신뢰받는 정부

○ 공직윤리 강화

- 비위공직자 관리자·부서 연대책임제 운영<충북>
* 징계처분 발생 시 소속 팀장·과장 근평 감점 및 하급기관 전보, 부서평가 패널티 등

○ 적극, 현장 행정 강화

-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 에너지복지(공공요금 감면) 수혜율* 제고<충남>, 찾아가는 공감세탁 서비스<인천>, 효사랑 건강주치의<서울>, 여권 무료배달 서비스<충남> 등
* 전기요금 할인 수혜율 향상('17년 62% → '20년 84%)
-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강원>
-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충북>
* 의료사각지역 진료서비스, 농기계 점검, 영농상담, 법률 상담, 일손돕기 등 원스톱서비스

○ ICT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 어린이 행동특성 빅데이터 분석 기반 어린이중심 교통안전정책<서울>
- IoT 기반 독거노인 라이프케어 서비스<대구>
* 상수도 수도사용량 분석 후 이상징후 감지시 안부확인(1,500명)
* 소리·불빛으로 복용시기 안내 및 복용여부 보호자전송 기능 있는 스마트약상자 보급
- 서비스인구 등 상업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대구>
* 상업적 활용가능한 성별, 연령, 시간대, 분기, 계절별로 세분화된 서비스인구 현황 제공
- IoT 활용 우리집 전기저금통(~'20, 500kwh 누적절감)<강원>
* IoT 플랫폼 통해 실시간 전기소비량 제공하여 능동적 에너지 절약행동 실천(캐쉬백 제공)
- 드론활용 재난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 행정시스템 구축<충북>
- IoT 활용 현장형 증강현실(AR) 관광콘텐츠 제작<서울 중구>
- IoT 기반 디지털 스마트 대중교통 서비스<제주>
* 초정밀(차선단위) 위치데이터 공유로 실시간 버스운행상황 정보, 기상정보 등 제공
- 민관융합 빅데이터 활성화로 지역밀착형 신규 서비스 발굴<제주>
* 도(공공wifi, BIS 등)+민간(카카오, 카드사 등) 활용성 높은 민관 융복합 빅데이터 제공